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mailto:tsc@pspd.org))  
제 목 [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날 짜 2023. 02. 07. (총 2 쪽)

## 성 명

###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1.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에 반대한다.
2.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3.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끝